

2012. 4. 6.

#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2년 4월 6일(금) 14: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KDI 대외협력실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# 중장기 미래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

## 1.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

- 한 세대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기전략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시급
-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·고령화, 저성장, 양극화 등 장기·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, 기로에 위치
  -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과 분배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
- 그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등 단기현안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반면, 중장기·구조적 관점에서의 정책대응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
  - 제도·구조개선에 중점을 둔 대응방안의 수립 및 집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
- 글로벌 트렌드와 리스크 요인의 체계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미래에 닥쳐올 도전과 기회를 미리 보고, 멀리 보고, 지금 준비해야 함

-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하여,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
- “미리 준비하는 미래” (proactive future) : 미래위험의 대비
  - \* 고령사회 대응, 기후-에너지, 자원-식량 문제 등
- “모두가 함께 하는 미래” (inclusive future) : 사회통합의 강화
  - \* 사회적 자본, 일자리, 대-중소기업 등
- “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” (creative future) :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충
  - \* 신인구전략, 미래 인재 양성, 신흥국 활용 등

## 2. 중장기 미래 트렌드

### ① 인구구조의 변화

□ 세계 인구는 2010년 69억명에서 2040년 88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7.6%에서 14.2%로 크게 증가 예상

#### ○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

- \* 선진국은 고령화로 경제활력 쇠퇴, 젊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고성장하는 개도국으로 세계경제축 이동

#### ○ 복지비용증가, 소비성장 패턴의 변화

- \* 선진국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여 복지비용이 증가, 노후대비 저축 증대로 성장 및 소비 패턴의 변화 초래

□ 한국의 총인구는 2030년대 초반부터,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

- \*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, 이는 한국 미래의 근본적인 도전과제
- \*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의 구축과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 시급

## ② 기술변화의 가속화

- IT 이어 BT·NT 등 신기술 개발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, 기술의 융·복합화 및 기술주기 단축으로 불확실성 확대, 새로운 위험요인 발생
- 기술변화로 고용구조는 고기능 인력 중심으로 전화
  - \* 지식·정보 격차의 확대로 사회양극화가 심화, 이러한 기술-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 확보가 관건

## ③ 환경·자원 문제의 심화

-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온난화 지속
  - \* 산업화·도시화·화석연료 사용 증대로 CO2 등 온실가스 증가
  - \* 물·공기·토양 오염, 오존층 파괴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
- 전세계적 에너지자원 불균형 심화
  - \* 중국,인도 등 신흥경제의 고성장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2030년 현 수준의 1.4배 도달
  - \* 성장의 지속가능성 및 자원식량 확보 등 새로운 안보문제 제기

## ④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

- 국제분업체제의 변화와 세계경제축의 다원화
  - \* 미국·유럽·일본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국 및 중국·인도 등 신흥국의 비중이 급증
  - \* BRICs 등 신흥경제의 고도성장, EU·아시아의 역내무역 증대

○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증대

- \* 세계경제의 동조화로 국지적 위기가 세계적 위기로 증폭

○ 불평등 및 국내외 갈등 심화

- \* 과거 10년간 GINI 계수가 47개국 중 30개국에서 악화

⑤ 정치의 다원화와 문화의 가치 증대

○ 개인 및 시민사회의 요구와 역할이 증대되고, 사회참여 및 소통방식의 근본적 변화(사이버 공간 확대)와 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

○ 기후변화, 자원부족 등을 둘러싼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되는 등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

- \* 특정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, 힘의 중심이 미국·유럽에서 아시아 및 신흥국으로 이동

○ 세계화 및 기술 발전으로 문화접변이 가속화하는 가운데, 소득수준 상승으로 삶의 질, 여가 및 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

- \* 소비자 욕구가 다양화-고도화되고,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콘텐츠 생산-유통-소비의 가치사슬 변화

4. 리스크와 대응과제

□ 이러한 중장기 트렌드의 변화에는 기회와 위협의 요소가 공존

○ 인구구조의 변화: 인적자원의 다변화와 여가·실버 등 신산업 발전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, 경제 활력 상실, 복지비용 증가 위험이 존재

○ 기술변화의 가속화: 새로운 시장 창출, 사회·구조적 문제 해결의 기회와 함께, 기술 패권·장벽, 지식정보격차 확대라는 위험이 상존

- 환경·자원 문제의 심화: 새로운 시장·기회가 열리고 환경의 가치가 증대되는 반면, 지속성장 기반 상실과 국가 간 분쟁의 위험은 증가
-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: 시장 확대와 국제질서 다극화의 기회이지만, 경쟁격화, 구조조정, 불확실성 증폭 등의 위험도 수반
- 정치의 다원화와 문화의 가치 증대: 민주주의 진전과 문화적 개방·다양화의 기회이나, 정치과잉, 국제 분쟁 증가, 세대·문화간 갈등 위험이 발생

□ 중장기 트렌드에 따르는 기회와 위협을 고려한 대응과제의 예

### 미래트렌드 변화와 대응과제

	전개양상		대응 과제
	기회	위협	
<b>인구구조</b>	- 인적자원 다변화 - 여가·실버 등 신산업 발전	- 경제활력 상실 - 복지비용 증가	- 산업구조 전환 - 복지체제 재설계
<b>기술변화</b>	- 새로운 시장 창출 - 사회·구조 문제 해결	- 기술 패권·장벽 - 지식정보격차 확대	- 기술-산업 생태계 - 새로운 인재 양성
<b>환경·자원</b>	- 새로운 시장·기회 - 환경의 가치 증대	- 지속성장 기반 상실 - 국가 분쟁 증가	- 에너지구조 전환 - 국제공조, 자원협력
<b>세계경제</b>	- 시장 확대 - 국제질서 다극화	- 경쟁격화 구조조정 - 불확실성 증폭	- 글로벌 체제 참여 - 사회통합 강화
<b>정치·문화</b>	- 민주주의 진전, 국격 제고 - 문화적 개방·다양화	- 정치과잉, 국제 분쟁 증가 - 세대·문화간 갈등	- 정부역할 재정립, 소프트파워 강화 - 다문화 통합·공존 기반

## 5. 향후 정책방향

### □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

- 입시중심의 획일적 교육을 혁파, 창의성 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최고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고, 고등교육의 다양화·글로벌화를 통해 교육 개방 및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교육산업을 육성

### □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

-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중산층 복원 및 근로빈곤층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, 고용·복지전달체계를 통합

### □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

- 기술벤처 등 시장기제 및 지식재산권·표준 등 기술인프라를 강화 시키고 창의성·수월성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로 개편하여 국가적 문제·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투자를 확대

### □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

-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 하는 시장중심 경제운용과 규제·감독 체계 및 시장 인프라정비 작업을 지속하고 내부 지향적 보호주의를 지양하여 개방과 자유화로 세계화에 대응

### □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

- 다양성과 호혜적 개방성을 갖춘 열린 문화를 통해서 다민족·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사회통합을 유도 그로 인해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

## □ 평화와 공영의 국제적 리더십

- 능동적 세계화로 국제관계에 새로운 리더십을 실현, ODA 등 국제사회에의 기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·자원 등 외교역량 강화, 동북아 정치·경제체제의 재구조화 대응, 한반도 상생발전의 기반을 조성

## [보론] 설문조사 결과

□ 중장기 전략 수립시 우선순위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KDI 경제정보센터를 통해 기업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(3.2~3.28)

\* (기업인) 기업 CEO 1,000명(268명 응답)  
(일반인)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

○ 미래변화의 흐름과 대응방안, 시급한 핵심 정책과제들과 세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조사

- 설문(총 91 문항\*)은 주요 선진국의 장기 전략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구성

\* 미래변화 흐름 9개, 전략수립 적정기간 5개, 중점가치 4개, 핵심 정책과제 10개, 정책과제별 추진대책 63개

- 다만, 정책과제별 우선 추진대책은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조사

□ 미래 위험요인·중점가치, 핵심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일반인과 기업인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함.

○ (미래위험) 미래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기업인, 일반인 모두 ① 저출산·고령화 ② 소득·계층간 양극화를 최우선 순위로 선정

- 다만, 기업인은 저출산·고령화를 더 큰 위험요인으로 인식하였고, 일반인은 소득·계층간 양극화를 중시함.

○ (중점가치) 기업인과 일반인은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지목

○ (정책과제) 기업인과 일반인은 향후 정부가 우선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로 저출산·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보다 높은 순위를 부여

□ 그러나 일반인과 기업 CEO 간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남.

① 일반인은 미래변화 흐름 중 기후변화(3위)와 삶의 질, 여가 문화에 대한 가치중대(5위)를 중요시하는 반면,

- 기업인은 세계 경제 불안정성 증대(4위)와 기술변화의 가속화(5위)에 중점을 둠.

②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중점가치 중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 다음으로는,

- 기업인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, 일반인은 삶의 질 향상을 중요시함.

③ 핵심 정책 과제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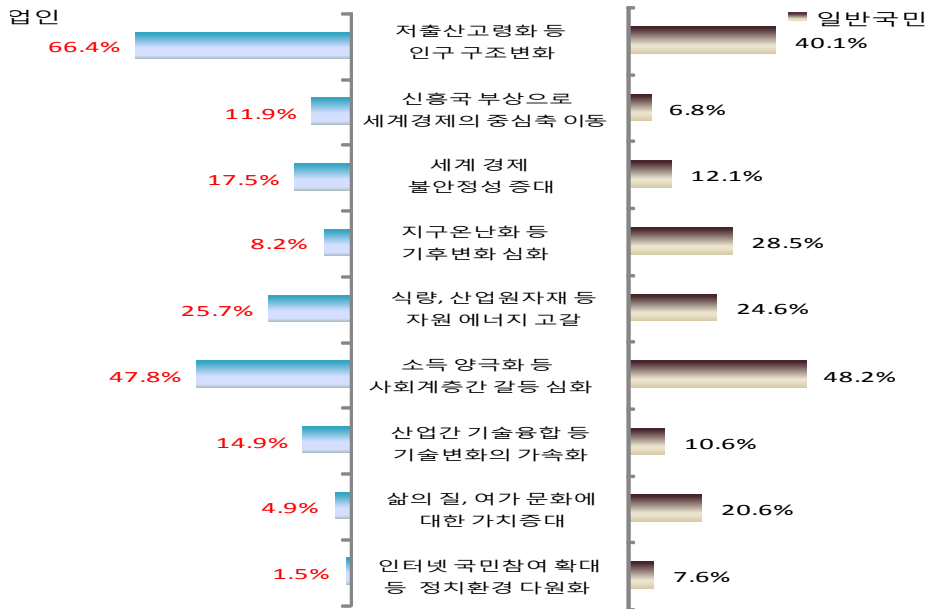
- 기업인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하여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반면, 일반인은 낮게 평가

\* “성장 잠재력 확충” 우선순위(10개 과제 중): 일반인 10위, 기업인 4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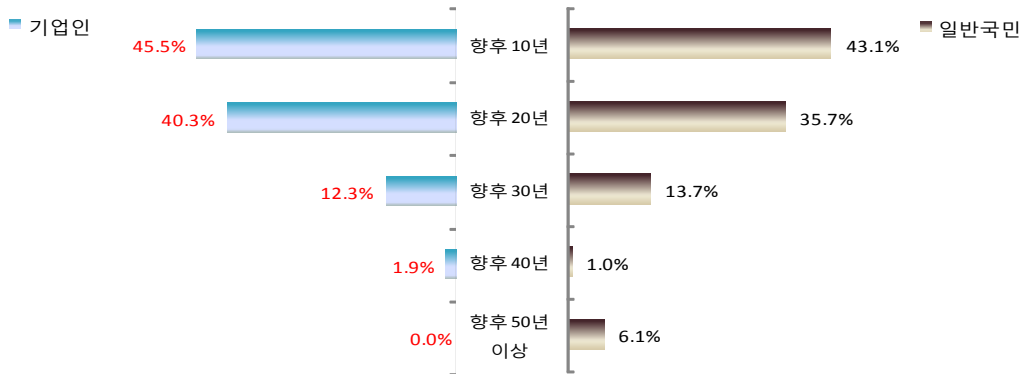
④ 한편, 기업 CEO들은 핵심 정책과제별 추진대책으로

- 보육부담 완화
- 산업경쟁력 강화
-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
-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
- 계층간 이동성 강화
- 유연근무제도의 확산
- FTA 확대 및 활용 강화 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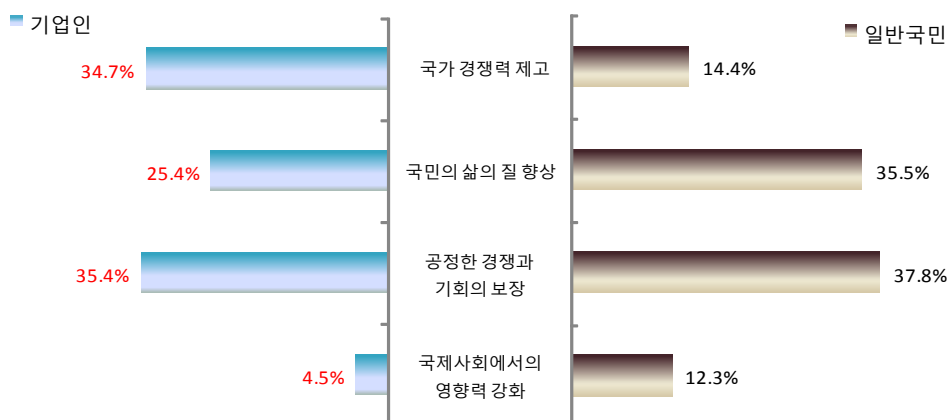
① 국가발전을 위해 대비해야 할 미래변화의 흐름



② 국가 중장기 전략수립 기간



③ 미래변화에 대응해 추구해야 할 중점가치



## 참고2

## 핵심 정책과제별 시급성 순위 및 추진대책

핵심 정책과제	시급성 순위*		정책과제별 추진대책 (복수 응답)
	기업인	일반인	
1. 저출산·고령화 완화 및 대응	1	2	① 보육부담 완화 등 출산율 제고(76.1%) ②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(49.6%) ③ 여성·고령 인력 경제활동 참여 제고(39.6%) ④ 건강의료보장 체계 구축(11.9%) ⑤ 부양세대와 피부양 세대간 갈등해소(10.1%)
2. 기후변화 적응· 희소자원 확보	공동 4	4	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(75.0%) ② 희소광물 및 식량자원 확보(45.5%) ③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제고(31.3%) ④ 국제공조 자원협력 강화(19.8%) ⑤ 기후변화 적응 재난방지 인프라 정비(14.9%) ⑥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시행(9.3%)
3. 성장잠재력 확충	공동 4	10	① 산업경쟁력 강화 등 지속성장기반 구축(47.8%) ②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(38.1%) ③ 기초·원천연구 역량 강화(35.4%) ④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(26.1%) ⑤ 대중소기업 관계구조 개선(22.8%) ⑥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(14.9%) ⑦ 관광,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(13.1%)
4. 기업의 경쟁력 강화	7	8	①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(52.2%) ② 규제완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(43.7%) ③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화(28.7%) ④ 창업촉진을 통한 신사업 발굴(25.0%) ⑤ 다양한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(24.6%) ⑥ 금융 세계 지원 확대(12.7%) ⑦ 사양 한계기업의 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 촉진(9.3%) ⑧ 인력부족 부문에 대한 외국인 인력수입 확대(1.9%)
5. 일자리 창출	2	1	① 다양한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(54.1%) ②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(29.5%) ③ 세제지원 등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(26.5%) ④ 공교육 및 직업교육 내실화(24.6%) ⑤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일자리간 차별시정(19%) 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Job-sharing 활성화(17.5%) ⑦ 창업절차 간소화 등 창업활성화(13.1%) ⑧ 구인·구직자 매칭 등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(11.6%)

\* 5점 척도(①전혀 시급하지 않음 ~ ③보통 ~ ⑤매우 시급)으로 평가한 점수 순

핵심 정책과제	시급성 순위*		정책과제별 추진대책 (복수 응답)
	기업인	일반인	
6. 사회적 통합강화	3	3	① 공정경쟁을 통한 계층간 이동성 강화(64.9%) ② 기부, 신뢰문화 조성 등 사회적 자본 확충(33.6%) ③ 누진세제 강화 등 소득격차 완화(30.2%) ④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확충(23.9%) ⑤ 세대간 갈등 해소(23.5%) ⑥ 여성, 노인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(12.3%) ⑦ 탈북자, 해외동포, 다문화 가족 등의 사회적 융합 제고(9.3%)
7. 국가 간 협력 및 교역 강화	9	9	① FTA 확대 및 활용 강화(64.9%) ② 국제 전문인력 양성(40.7%) ③ 국제논의 참여 확대 및 국제기구 내 역할 제고(31%) ④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(28.4%) ⑤ 민간의 국제개발사업 참여 유도(22.8%) ⑥ 공적개발원조(ODA) 규모 확대(11.6%)
8. 일과 삶의 양립 기반 구축	8	7	① 유연 근로제도의 확산(69.4%) ② 보육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(53.4%) 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(49.6%) ④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(17.2%) ⑤ 여성친화적 사회기업 육성(7.1%)
9. 정부-민간 간 역할 분담과 조직화(거버넌스)	10	6	① 시장-민간-정부 간 국가기능의 합리적 재편(58.2%) ② 정부-민간-시민단체 간 정책네트워크 활성화(38.1%) ③ 통합적 위기관리 등 정부의 정책역량 배양(36.6%) ④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(31.3%) 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(18.7%) ⑥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(14.6%)
10. 글로벌 인재양성	6	5	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시스템 구축(75.0%) ② 기초과학기술분야 등 연구개발투자 확대(52.6%) ③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(30.2%) ④ 창의적 인재 활용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(27.6%) ⑤ 우수한 해외교육기관(대학 등) 유치(13.1%)

\* 5점 척도(①전혀 시급하지 않음 ~ ③보통 ~ ⑤매우 시급)으로 평가한 점수 순